

꽉막힌 선거구 획정 ‘빅딜’로 물꼬틀까

여 ‘오픈프라이머리’ 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절충 “목적·취지 완전히 다른 두가지 논의는 졸속 개혁” 비판도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물의 전쟁’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한 여야 간의 ‘빅딜’ 설이 술술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 경선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절충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의 명분이 여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결과 지역구 의원 수가 늘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도입을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숫자가 늘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여야 동시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 서라도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장하는 ‘공천제 개선’과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편’을 각각 주고받는 ‘빅딜’ 방식이 논의의 물꼬를 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사건을 전제로 “결국 선거법 제도 개선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같이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일본식 병립형’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한 뒤 권역별 할당 비례의석을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사안을 ‘빅딜’로 접근하는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묶어서 협상한다는 자체가 타당성론이며 졸속 개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의 빅 딜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하지만 양 당의 지도부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전격 합의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정치권, ‘롯데 사태’ 질타 재벌 지배구조 개혁 탄력 만나

여야 정치권이 3일 한 목소리로 롯데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비판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소수 자본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이 롯데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도 높아지면서 차제에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공론화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 사태를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일갈한 뒤, 매프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에 “불행사나운 롯데가(家)의 ‘돈 전쟁’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벌개혁 대신 재벌에 다양한 혜택을 줬왔다. 재벌 총수는 범법하고도 관용과 변칙으로 사면을 받았다”며 “감옥에서도 편의가 제공돼 병원에서 세월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 속에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확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근대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책이 뭉치 검토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재벌기업 문제는 노동개혁보다 먼저 한국경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벌기업의 독단적 경영이나 지배구조 문제를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의 제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김태호, 총선 불출마 선언…새정치로 불뚱?

여권 인사들 불출마 러시 속 ‘86하방’ 등 연쇄 효과 주목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세월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라면서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맑음을 잃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조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미래에 어울리는 실력과 깊이를 갖춘 김태호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김부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했던 김 최고위원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불출마 선언은 지난 2월 4선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을 시작으로, 지난 4월 국회의원장을 지낸 6선의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 5월에는 비례대표인 손인춘 의원에 이은 여당에서만 네 번째다.

이처럼 여권 인사들의 불출마 러시가 계속되면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종진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어느 때보다 공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 가운데 문재인 대표만이 정확히 20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2·8 전대 때 총선 불출마 카드를 던졌다.

그런데 지난 5월말 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 출범과 함께 ‘총선 불출마’는 ‘자기 희생’과 ‘기득권 포기’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부상했다. 김 위원장은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활동 시작과 함께 불출마를 선언

했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출마 행렬에 가세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할 불출마 선언은 이뤄지지 않은 채 잠잠한 분위기이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하방론’, ‘중진 용퇴론’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서로 상대방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여전히 여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을 평가절

하하며 자신은 패배하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당 관계자는 “불출마 배경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국민 눈에는 새누리당은 뭔가를 버리는 모습으로 비치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며 “언제 부턴가 진보정당에 오히려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탈당 처리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예정

성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피의자 일정을 봐조만간 소환하겠다”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 청장은 “신고한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 의원이 회유와 협박, 합의 시도를 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심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심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 조직국 관계자는 이날 “심 의원의 탈당 신고서가 오는 접수됐다”면서 “정당법상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당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정치, ‘8·14일 임시공휴일’ 적극 찬성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광복절인 오는 15일이 토요일과 겹침에 따라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매프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도 긍정적 반응이라고 한다”며 “우리 당은 적극 찬성하고 국무회의에서 원만히 통과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제에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국경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공론화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광복 70주년이 의미 있는 특별한 날이고, 국민의 소 비심리로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 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2등 - 리류 스타일러(1명)

* 3등 - 아이패드(3명)

* 4등 - 족욕기(10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자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